



주간통일정세 2010-28(2010.07.05~07.1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28

Contents

- >>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현지도도 1, 2위는 김경희-장성택 부부(7/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 상반기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경제 분야 현지도도를 강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현지도도를 가장 많이 수행
 - 통일부는 5일 북한 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현지도도는 총 77회로 지난해 상반기 77회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힘.
 - 분야별 현지도도는 경제 분야가 33회로 가장 많았고, 군 관련 21회, 외빈접견 등 대외활동 6회, 공연관람 등 기타 17회. 경제 관련 현지도도는 작년 동기의 27회에서 33회로 늘어났고, 군 관련 현지도도는 27회에서 21회로 감소
 - 김 위원장의 현지도도 수행은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56회로 1위를 차지. 작년 같은 기간 김경희 경공업부장은 수행 상위 10위권에도 들지 않았음.
 - 작년 상반기 42회로 수행 빈도 2위를 차지했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45회를 수행해 김 위원장과의 ‘지근 거리’를 유지. 다음으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40회), 최태복 당중앙위 비서, 현철해 국방위 국장(25회) 등이 뒤를 이었음.

- **北…박남기 친인척, 회령관리소 이송(7/7, 좋은벗들)**
 - 북한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의 희생양으로 지난 3월 처형된 박남기 전 당 계획재정부장과 다른 관련 간부들의 친인척 34세대가 지난달 14일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전원 이송
 - 단체는 북한 보안당국 간부의 말을 인용, “국가안전보위부 3처의 지시에 따라 저녁에 급히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들 친인척을 모두 끌어내 죄수용 유개차(지붕차)에 싣고 왔다”면서 “관리소로 들어갈 때 어떤 짐도 소지할 수 없게 했다”고 밝힘.
 - 또한, “22호 관리소는 회령시 창효리와 금생리 사이에 위치해있는데 유개차 8대와 완전무장한 군인을 태운 차량 3대가 호송에 동원됐다”며 “해외에서 인권침해니 유린이니 떠들어 대기 때문에 비밀 보장을 위해 한밤중에 호송해 주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함.



● 北…김일성 추모행사 성대(7/8, 데일리NK)

-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16주년(7월8일)을 맞아, 올해가 관행적으로 중시해온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정주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벌임.
- 신문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단둥(丹東) 같은 국경 도시에서는 지난 5일째부터 추모행사에 쓸 꽃다발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설새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면서 “작년은 ‘꺾어지는 해’에 해당돼 꽃다발 수요가 대단했는데, 올해는 꺾어지는 해가 아닌데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양으로 꽃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함.
- 이어 “올해 추모행사를 이처럼 크게 벌이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산 줄기’만 혁명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듯하다”면서 “일부 주민들도 ‘김정은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 또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예년과 달리 올해는 중앙당에서 추모기간을 선포했고, 주민들이 추모행사에 조직별로 참여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면서 “이에 따라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역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고 설명
- 매체는 “평양과 주요 도시의 기업소, 인민반, 당 조직 등 단위로 김일성 동상 참배와 헌화가 이어졌고, 김일성 육성녹음을 청취하는 ‘강연회’와 김일성의 업적을 회고하는 ‘학습회’도 조직적으로 열렸다”면서 “추모 기간 주민들의 장거리 여행도 통제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일성 사망 16주년 사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쳐 김일성 주석이 열어준 ‘주체의 길’을 따라 분발함으로써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소개
- 조선중앙방송도 7일 당·정·군 간부들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모여 기록 영화 ‘아버이 수령님, 일군(일꾼)들과 함께 계시어’를 관람했다고 전함.
- 당·정·군 간부들은 김 주석의 사망일인 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회고음악회 ‘영원한 미소’를 관람하기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각지방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려 함경북도와 량강도에서는 도 예술인들의 회고음악회가 열렸고 강원도, 자강도, 황해남도에서는 직맹원과 여맹원이 참여하는 회고음악회가 개최. 또 소년단 야영소에서는 ‘대원수님을 그리는 야영의 밤’ 행사가 열림.

● 北호위사령부, 김정일 잔여수명 ‘최장3년’ 결론(7/9,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가 앞으로 김 국방위원장이 길어야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함.
- 이 방송은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호위사령부 산하 ‘특수진료과’가 2008년 뇌졸중 발병 이후 신장투석, 만성후두염 등으로 악화



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신체적 약화뿐 아니라 우울증으로 감정의 골폭도 아주 심해졌다”고 말함.

- 방송은 또 “최근 김 위원장의 예술공연 관람이 아주 잦아진 것도 ‘현지지도’ 성격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와 정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특수의료진의 적극적인 진의를 받아 김정은(김위원장 3남)이 세운 아버지 건강수칙”이라고 설명함.

● 北김정각 ‘백두의 혁명전통 옹호 고수해야’(7/9,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오중흡 탄생 100주년을 맞아 중앙보고회를 열고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의 두리(주위)에 사상의지적으로, 도적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함.
- 김 제1부국장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열 백번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며 이같이 강조
- 그는 이어 “전체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은 반공화국 도발책동에 대처해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해야 한다”며 “적들의 정치군사적 도발과 침략행위, 자주권 유린행위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임.
- 이날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참석

● 北김정은, 노동당 고위직 차지…獨 클리츠 대표(7/10, 미국의 소리 (VOA))

-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발터 클리츠 한국사무소 대표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후계구축과 관련,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권력 이양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김정은은 현재 노동당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지난 4월 26~28일 평양을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클리츠 대표는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당과 내각의 고위 관리 8명이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독일을 방문, 도시 개발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독일 외무부 당국자, 의원들과도 만나 6자회담과 후계문제, 식량난,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힘.
- 그는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후계 문제가 북한 당국의 핵심 현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북한의 당과 군 등 모든 조직에서 권력 승계와 관련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함.

- 이어 특히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지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방북 당시 아이들이 ‘청년대장’ 김정은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소개
- 그는 또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과 관련해 “핵무기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외부로부터의 핵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북한 관리들이 자신과의 면담에서 “현재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급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마당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
-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관리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길 원하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무관함을 주장했다고 그는 전함.

■ 김정일동향

- 7/7 김정일,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도(7/7, 중통)
·백계룡(강원도당 책임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당 부장), 주규창·이재일(당 제1부부장들) 동행
- 7/7 김정일, 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 장아찌생산공정 현지도(7/7,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저작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 발표 관련 선군정치는 “승리와 번영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선군정치의 ‘위대성, 정당성’ 주장(7/5, 중방)
- 訪北 한상렬 목사, 동명왕릉(동명왕릉개건기념비와 왕릉, 돌조각상들, 정릉사)과 평양학생소년궁전·3대혁명전시관·모란봉제1중학교 등 참관 및 평양교예극장에서 종합교예공연 관람(7/5, 중통)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리영수(黨 부장)·최수동(직총 부위원장/보고) 등 참가下 김일성 사망 16돌 즈음 맹세모임(만수대언덕 김일성동상 앞) 진행(7/6, 중방)
- 김일성의 혁명무력건설과 정권건설 역사는 “군대와 국가의 강화발전을 위한 만년토대로 되고 있다”며 김父자의 위대성 칭송(7/7, 중통·노동신문)
- 김父자영상 모자이크벽화, 여러 단위들에서 건립 및 준공식들 진행(7/8, 중통)
· 양강도 해산영예군인일용품공장, 황북 신계군 백곡리·사리원청년역, 린산군 상하리 등
- 김일성 사망 16돌 즈음 당 및 국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중앙기관



- 책임일꾼들, 군 지휘성원 등, 금수산기념궁전 참배(7/8, 중통)
- ‘반제민전’ 부위원장, 김일성의 조국통일 관련 친필을 남긴 16돌 즈음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6.15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싸워 나갈 것” 등 요지의 담화 발표(7/8, 중통)

나. 경제

● 北… 외국인 금강산 숙박상품 개발(7/5, 조선신보)

-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금강산 관광상품의 개발에 나서,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2박3일 일정의 금강산 숙박관광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전함.
-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부원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비행편으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을 할 경우, 평양을 출발해 원산시의 숙소에서 묵게 되는데 동해안의 항구도시를 거점으로 하루로 명산을 돌아본다”며 “하루로는 금강산을 다 돌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힘.
- 김 부원은 “2박3일 정도로 금강산 지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종다양한 관광노정을 구상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만물상, 삼일포, 구룡연의 세 지구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지구에 대한 관광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
- 신문은 “머지않아 금강산 현지에서 숙박하면서 관광하는 새 상품도 내놓게 된다”며 “내년부터 인기있는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견하는데 이르면 8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아리랑 공연기간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소개
- 김영일 부원은 “올해 4월 중국의 관광부문 일꾼 300명이 포함된 대규모 방문단이 금강산을 방문했고 유럽 나라의 시찰단도 현지를 돌아봤다”며 “현재 금강산 지구 관광을 외국의 관광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제안하고 있는데 그 반향이 아주 좋다”고 주장
- 이어서 “천안호 사건으로 인해 관광객도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는데 큰 영향은 없었다”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진행되는 기간은 조선의 기본관광계절인데 여행사 일꾼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지 우려될 정도로 많은 예약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외국인 여행객 모집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

● 올해 북·중 무역규모 18% 증가(7/6, 연합신문)

- 천안함 사태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올해 들어 북한과 중국 간 무역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6일 중국 해관(세관)의 올해 1~5월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중 무역규모는 총 9억8천363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8억3천307만 달러보다 18.1% 증가
- 북측 입장에서 대중 수입은 7억2천719만2천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9.0% 증가했지만 수출은 2억5천643만8천 달러로 4.9% 감소.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4억7천75만7천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0% 확대

- 금액 기준 북한의 최대 대중 수입품은 원유로 25만4천t을 기록해 전년 동기의 24만7천t보다 소폭 증가. 그러나 금액기준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1억5천709만7천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무려 76.0%나 급증
- 특히 쌀(2만4천400t), 옥수수(3만1천400t), 콩(2만500t), 밀가루(3만4천t) 등 주요 곡물 수입은 11만3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 비료 수입도 8만1천943톤으로 전년 동기의 3만8천4톤에 비해 115.6% 급증. 곡물과 비료 수입 증가는 최근 악화 우려가 일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금액 기준으로 항공유(46.8%↑)와 화물자동차(98.7%↑), 자동차 휘발유(47/4%↑), 유연탄(137/0%↑) 등도 수입이 증가
-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는 철광이 4천394만5천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1.6%나 증가하며 수출 비중 1위를 차지. 이에 비해 무연탄 수출은 4천106만달러로 전년보다 66.3% 급감

● 北…합영투자지도국→합영투자위원회 확대개편(7/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확대·개편. 신문은 “조선에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개편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8일에 발표됐다”고 밝힘.
- 북한에서 ‘지도국’은 우리의 처(處)급 기관으로 내각의 기구이지만 성(省)보다는 하위 기관이며 ‘위원회’는 성보다 규모가 큰 조직.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은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3차회의에서 체육지도위원회를 체육성으로 개편하면서 북한 내각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어서 이번에 합영투자위원회를 만들에 따라 내각 산하에 위원회는 4개로 늘어남.

■ 기타 (대내 경제)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일꾼-노동자들, 생산공정의 개건 현대화공사 박차(7/5, 평방)
- 평양열사능 준공식, 양만길(평양시인민위원장/준공사)등 참가下 낙랑구역 장교리에서 진행(7/7, 중통)
- 개성시, 소금밭을 새로 건설하여 햇소금 생산이 시작됐다고 선전(7/7, 중통)



다. 사회·문화

- **개성공단서 北 통근버스 2대 충돌. 50여명 사상(7/7,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를 태운 통근버스 2대가 충돌,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7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개성공단 내 교차로에서 북한 근로자를 태운 통근버스 1대가 다른 통근 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북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친 것으로 파주경찰은 파악. 우리 근로자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 사고는 당시 개성공단에 비가 많이 내려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음. 경찰 관계자는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을 오고 가는 근로자를 통해 사고내용이 파악됐다.”라며 “빗길 사고로 파악될 뿐 사고 경위와 인명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함.

- **국제적십자연맹, 北적십자와 사업점검 워크숍(7/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연맹(IFRC)이 이달 중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워크숍을 갖고 재난 대비, 질병 퇴치 등 대북사업 전반을 점검할 예정
 - 방송은 7일 발표된 IFRC의 동아시아 지역 보고서를 인용, “IFRC 북한 사무소가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북한에 지원된 의약품과 의료 장비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함.
 - 이어 “북측 관계자들이 재난 대비 등과 관련해 배운 내용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하반기 사업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IFRC는 올해 대북사업 예산을 미화 950만 달러(한화 116억원)로 늘려 홍수 등 재난방지와 질병 퇴치, 상·하수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진료소 2천여 곳에 5천여 개의 구급약 상자를 제공하고 지역 단위의 응급조치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방송은 설명

- **北…홍수피해 예방 분주(7/8, 조선중앙통신)**
 - 장마철을 맞아 북한 전역에서 홍수피해 예방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신문은 “강원도, 자강도, 함경남도 등 각지의 대·중·소규모 수력발전소에서 언제(둑)와 취수구, 물길 등 수력구조물 보수정비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광산 지역인 안주, 순천, 단천 등에서는 갭 안팎의 배수설비를 점검·보수하면서 채취한 석탄과 광석의 유실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함.



- 이어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의 협동농장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랑과 배수로를 점검하고 있고, 갑문관리 부문에서는 큰 물이 날 때 언제든지 배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상수문국(기상청 해당)은 큰물 및 기상 예보를 정확히 하고, 기상수문 자료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통신은 말했다.

● 北통신, ‘미국인 고프즈 자살 기도’(7/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해당기관의 통보’를 인용, “교화중에 있는 미국인 고프즈가 심한 죄책감과, 구원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최근 자살을 기도했으며 현재 병원에 옮겨져 구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이 통신은 그러나 고프즈씨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했고, 현재 심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의 이권을 대표하는 주조 스웨리예(스웨덴) 대사관이 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요해(이해)했다”고만 덧붙였다.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노동당 출판사, 도서 ‘김일성의 혁명역사자료집(11)’ 출판(7/6, 중통)

2. 대외정세

● 北외무성, 검열단 파견 재차 강조(7/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6일 천안함 사건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검열단 파견과 이를 위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실무접촉 개최를 재차 주장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에서 “미국은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은 조(북)·미 군부장령급(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사건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안호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커녕 그 진상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라며 정전위 논의를 거부
- 그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해 진상부터 밝히자는 것, 그와 관련해 북남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허위와 진실을 가려보아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재해 구조능력 호평(7/6, 노동신문)**
 - 신문은 중국 정부가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여준 구조·구호 능력을 높이 평가. 중국의 구조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며 질서 있는 구조시스템 덕분에 재해 극복이 효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함.
 - 이어 중국 지도층이 재해극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인민해방군이 재해 구조에 앞장서는 빛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칭찬. 또 북한 인민은 중국 인민이 홍수 피해를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함.

- **中홍십자회, 北적십자에 물자 기증(7/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을 방문중인 중국 홍십자회 대표단이 7일 조선적십자회에 물자를 기증. 방송은 “기증식이 7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으나 중국 홍십자회측에서 전달한 물자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기증식에는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과 학림나 중국 홍십자회 부회장,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

- **北조평통, 안보리 문서 채택시 결사전 불사(7/7,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걸고 드는 모략문서가 조작되는 경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국가적 존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침해로 간주하고 국권수호를 위한 정의의 결사대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정의와 양심, 분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과 괴뢰들의 불순한 모략책동을 각성있게 가려보아야 하며 유엔이 또다시 미국의 농락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
 -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G8(주요 8개국) 의장성명과 중미 7개국 정상 특별선언문 등을 거론하며 “함선 침몰사건을 국제무대에까지 들고 다니며 반공화국 대결모략소동에 날뛰는 괴뢰보수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말함.

- **北신문, G8대북성명 관련 日총리 비난(7/9,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지난달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대북 비난성명 채택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에 대해 “미국의 반공화국 소동에 돌격대로 놀아됐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입이 헤프면 화를 입는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천안호 사건은 미제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 괴뢰들이 조작해낸 모략극인데 간 총리가 남의 풍(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면서 “일본이 진심으로 자국의 안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 문제에서 심사숙고하고 자제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



■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무부 대변인의 對北 인권문제 제기(7/5, 중통)
- 박용연, 말레이시아 駐在 대사, 7/1 駐在國 국왕 작별 방문(7/5, 중방)
- 서세평, 네덜란드 駐在 대사, 6/30 駐在國 여왕에게 신임장 제출(7/5, 평방)
- 김영남, 7/4 코모르 독립 35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7/5, 중통)
- 말라위 독립 46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7/2 축전(7/5, 중통)
- 김영남, 베네수엘라 독립절 즈음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대통령에게 축전(7/5, 중통)
- 박의춘 외무상, 베네수엘라 인권주권외무상에게 축전 발송(7/5, 중통)
- 中 인민대외우호협회, 7/6 北-中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49돌 즈음 연회 마련(7/7, 평방·중통)
- 김영남,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된 '부르니스와브 궤모롭스키'에게 축전(7/7, 중통)
- 일본에서 7/4부터 북한 입·출항 외국선박들에 대한 화물검색 허용 등 '특별조치법' 정식 착수, 이에 따른 공해상에서의 화물검색 실시 예정 비난(7/8, 중방)

3. 대남정세

● 北신문, 南 PSI 해상차단훈련 용납 못해(7/5,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5일 우리 군이 오는 10월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데 대해 “군사적 충돌과 북침전쟁 도발을 서슴지 않으려는 흥계의 발로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인 도발 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대한 전면참가를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했다”면서 “PSI 전면참가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이미 경고한 바대로 무자비하며 단호할 것”이라고 위협
- 이어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역적패당이 꾸며낸 함선침몰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

● 北, 유엔사 ‘천안함해명’ 제안에 실무접촉 역제의(7/9, 조선중앙통신)

-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해명 기회를 주겠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북미 장성급회담 제안과 관련, 북한이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옴.
- 통신은 북미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9일 유엔사에 전달한 통지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검열단 파견)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미(북미) 군부 장령급(장성급)회담에서 천안호 사건을 논의하자는 미군측 제의에 유의하기로 했다”면서 “조미 군부 장령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13일 10시 판문점에서 대좌급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수정, 제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함.

- 통지문은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러한 발기는 천안호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밝히려는 드팀(흔들림) 없는 의지의 발현”이라며 “미군 측이 천안호 사건의 해결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 군대의 제의를 무겁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남)

- 대통령의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 기고(6/26, 미국과 동맹의 소중한 거둬들임 확인 등) 관련 이는 “미국을 등에 업고 反北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려는 기도”라고 선동(7/5, 평방)
- 통일부장관의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동상제막식 추모사(6/22)를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역사를 찬미하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비난(7/5, 중방)
- 6.15, 10.4선언 불이행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내외 반통일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7/5, 중통·노동신문)
-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6/29) 부결 관련 “보수패당의 반역정책 강행에 대한 응당한 결과”라고 주장(7/5, 평방)
- 北, 연합뉴스 인용 南35사단 훈련(전북 진안군 일대)을 “침략전쟁 준비”라고 비난(7/7, 중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동해 잠수함 거론하며 의장성명 반대”(7/11)

- 박인국 유엔 대사는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에 대해 국내에서 우리가 중국에 밀린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협상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협상과정의 뒷얘기를 털어 냈음. 박 대사는 “중국은 처음에 안보리에 오는 것조차도 강하게 반대했다”면서 “나중에 중국 대사에게 들어보니 공식 회부된 뒤 북한 측에서 중국 측에 ‘왜 그것을 못 막았느냐’며 엄청나게 항의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 지난달 중순 ‘P5(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2(한국, 일본)’회담에서 본격적인 문안 조율 작업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규탄, 비난’(condemn)이라는 용어는 절대 안 되고, ‘공격’(attack)은 ‘사건’(incident)이나 ‘행위’(act)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문맥상에서 북한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반대했다고 전함.
- 형식적으로도 의장성명보다 격이 낮은 의장의 ‘언론 발표문’으로 하자고 요구했다고 박 대사는 전했다. 중국이 이같이 주장한 근거는 1996년 동해 잠수함 사건 당시 안보리의 대응이었음. 당시에는 잠수함이라는 물증도 있었고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성명에서 규탄이나 비난 같은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이라는 표현조차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는데도 당시보다 강한 성명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논리였음.
- 그러나 합동조사단의 안보리 브리핑이 있고 난 뒤 중국이 서서히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함. 박 대사는 “당초 중국은 브리핑을 취소 또는 연기시키려고 의장에게 압력을 가했고, 실제로 이 브리핑이 3~4일 가량 연기됐다”면서 “그러나 브리핑에 외국 전문가 6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안보리 회원국들에 ‘아 이건 북한의 짓이구나’ 하는 믿음을 줬고, 중국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 당시 미국과 이란, 가자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던 터키가 합조단 브리핑장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중국과 북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박 대사는 전했다.
- 그는 또 “논의 초기 북한의 검열단 파견 요구가 안보리 내에서 상당히 먹혔다. 일부 안보리 대사들이 ‘당사국인데 말할 기회를 줘야 하



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정전협정 체제에서 그동안의 확립된 관행이 있음을 설명했고 중국이 예로 들었던 동해 잠수함 사건 때도 정전위가 가동됐음을 설명하면서 이들을 설득했고, 결국 성명 10항에 정전협정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는 문항이 들어가게 되는 부수적인 수확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달 하순 선진8개국(G8)의 천안함 성명이 발표되고, 두 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부터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박 대사는 밝혔다. 그는 "중국 외교 파트는 오랜 북한과의 특수 관계로 인해 그걸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중국 대표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진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들어간 성명 6항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엄연히 북한도 유엔 회원국인데 그들의 입장을 넣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해 중국과 정치적 타협이 있었음을 인정했음.
- 다만, 박 대사는 "이 조항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는 반응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원문을 보면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북한 하나일 뿐이고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반응, 예를 들어 터키 등과 같은 나라의 반응들을 유의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음.

● <천안함 대북 군사조치 언제 시행되나>(7/1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군당국이 그간 미뤄온 대북 군사조치 실행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군당국은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지 살포 작전 등을 안보리 조치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며 미뤄왔음. 그러나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을 책임주체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북한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행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한·미가 서해상에서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연합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가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에 가장 큰 관심사임.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은 6월 둘째 주에 예정됐다가 그달 넷째 주로 연기된 다음 7월 중으로 미뤄진 상황임.
- 한·미 군당국은 7월 중 실시를 목표로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군 고위 소식통은 전하고 있음.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일본 언론은 조지 워싱턴호가 지난 9일 오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발해 서해로 향했다고 보도했지만 항모 참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임. 군 소식통은 11일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



지 않았다”면서 “다만 양국은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 미국이 연합훈련 계획을 확정하는 데 멈칫하는 것은 서해상에서 항모가 참가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오찬 강연에서 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모든 국가는 적대세력에 대응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매년 이런 형태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분석되고 있음.
- MDL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의 ‘정신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 시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군은 본격적인 대북 심리전을 위해 MDL 일대 11개 지역에 대형 스피커(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음.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청취할 수 있어 북한군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왔음.
- 북한은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조준격과 사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음.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만큼 곧 유엔사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지역에 살포하기 위해 제작된 120만매의 대북 전단지도 확성기 방송 재개시점에 맞출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북한 선박의 남측 수역 진입 차단작전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군은 경고통신에 불응하고 우리 해역으로 무단 진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함을 이용해 강제 정선 또는 나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아직 해상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선박 차단조치 이후 북한 선박은 항해 속도 11노트를 기준으로 서해 남포에서 동해 청진, 원산까지 4일가량 소요됐으나 지금은 우리의 작전구역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5일가량 소요되어 유류비용이 늘게됐음.

● <‘포스트 천안함’ 항배 열쇠는 한미서해훈련>(7/11)

-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으로 유엔 조치가 매듭되면서 향후 전개될 한반도 안보 정세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 뜻밖에도 북한이 유엔 의장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 재개 노력’ 입장을 발 빠르게 밝히고 나오면서 긴장고조나, 대화재개냐를 둘러싼 갈림길을 예상보다 빨리 맞닥뜨린 양상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하면서 일단 거리를 두는 입장임.
- 한국 외교부는 10일 “앞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방안은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봐가며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



의해나갈 것”(김영선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선희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의미있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를 촉구했음.

- 안보리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북한이 오히려 대화를 거론하면서 ‘천안함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고,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모습임.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마자, ‘실효적’ 제재도 없는 채로 북한의 제안을 덤석 받으면서 6자회담 재개 행보로 전환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 부담스러운 일임.
- 전력에 비춰 북한 제안의 진정성도 의심되는데다, 한미 양국이 안보리 조치 이후 한미서해연합훈련, 양자적·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예고도 한 터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 때문에 향후 국면은 한미 양국의 서해연합훈련과 후속 대북제재의 강도, 이에 따른 중국, 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워싱턴 전문가들은 핵심적 열쇠는 서해합동군사훈련이라고 보고 있음. 한미 양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로 대규모 무력시위성격의 서해상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훈련실시를 예고해왔음. 하지만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해오다, 지난 8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반대 입장까지 천명했음. 미국의 설득으로 중국이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에 동참하면서 미·중간 ‘외교적 협력’이 이뤄진 상황에서, 서해군사훈련이 강행될 경우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포스트 천안함’ 정세는 아주 복잡해짐. 그렇다고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압력 때문에 서해연합훈련을 취소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이해도 갖고 있음. 때문에 미국이 서해연합훈련을 실시하되, 항공모함의 참가를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미·중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음. 중국은 작전 반경이 600~700km인 미 7함대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훈련에 참여할 경우 베이징(北京)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반대함.
- 서해 군사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관측돼온 조지 워싱턴호가 9일 일본 요코스카(横須賀) 기지를 출항했지만, 서해 진입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게 미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임. 미국의 항모 투입 여부나 방식도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성명발표 직후 한미합동군사훈련 계획은 변함없다면서도 “언제 발표가 있을지, 훈련장소가 어디가 되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미합동훈련의 시기,



장소, 규모 등에 탄력성을 둘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임.

- 워싱턴 소식통은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합동훈련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며 “천안함 의장성명에 중국이 반대한 ‘공격’ ‘규탄’ 등의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절충과정에서 서해 훈련문제도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후 행정부에 대북제재 이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후속 대북제재의 강도와 시기도 관심임. 미 싱크탱크 관계자는 “유엔의 다자적 제재와 독자적 제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며 “유엔 조치가 미흡할 경우 강도높은 독자적 제재가 취해질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유엔성명의 결과물을 평가한다면 후속 제재를 신중히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계속 검토하면서 이를 북한 압박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지만, 조치 발표 시기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은 서해훈련과 대북 제재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뉴욕 북·미 채널이나 중국을 통해 탐색하는 ‘숨고르기’ 기간을 가지면서 한미공조를 통해 ‘포스트 천안함’ 정세, 6자회담 재개 국면의 주도권을 쥐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임.

● <北, 6자회담 언급..‘출구전략’ 모색하나>(7/10)

-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6자회담’을 언급하고 나서 ‘북한판 출구전략’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음.
-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켰으나 이사회는 아무런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결속했다”고 평가했음. 의장성명이 천안함 사건의 공격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못한 데 대해 일단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안보리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북한이 의장성명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기보다 대화를 언급하는 등 매우 온건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임.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이번 유엔 의장성명이 남한과 북한 양쪽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각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됨.
- 외무성의 입장 표명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나선 사실임. 대변인은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9일 안보리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넘어



- 선 만큼 대화 재개라는 카드를 꺼내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북한은 앞서 9일 유엔군사령부의 북미 장성급회담 제안과 관련,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해 미국과 대화 의지를 피력함.
- 또 역류 중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씨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 내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고프씨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북한이 이처럼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자마자 미국과 대화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중국은 이번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고, 천안함 사건의 책임주체로 북한이 명시되지 못한 것도 중국의 역할 때문이었음.
 -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필요성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이러한 조언을 수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임.
 -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6자회담 복귀 등 미국과 대화를 요청했을 수 있다”며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의 연장선에서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북한 내부적으로도 현재의 ‘천안함 국면’으로부터 신속히 탈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존재함.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은 데다 셋째아들 김정은으로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 지도부에게 안정적인 주변 정세를 필요로 함. 여기에도 작년 11월말 화폐개혁과 뒤이은 잇단 반시장 조치로 경제상황이 악화돼 민심이반이 극에 달한 만큼 사회·경제적 안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원활한 외자유치 환경이 마련돼야 함. 특히 북한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대외정세의 관리가 중요함.
 -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세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천안함 사건 이전에 논의되어온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음.

● 北외무성 “6자회담 통한 평화협정체결 노력”(7/10)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침몰공격 규탄 성명에 대해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데 유의한다”며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문답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켰으나 이사회는 아무런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결속했다”며 “‘천안’호 사건은 애초에 유엔에 갈 필요가 없이 북남 사이에 해결되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반도에서 ‘충돌과 그의 확대를 방지’할 데 대한 의장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그 에 역행하여 무력시위, 제재와 같은 도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의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충돌확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야 말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지에 들어갈 때까지 해저상태를 포함한 사건현장을 일체 꾸밈 없이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대목만 거론한 채 “북한에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힌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음.
- 앞서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9일(현지시간) 안보리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는 오늘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앞으로 평화협정을 완성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절차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의 이같은 반응은 그동안 안보리에서 천안함 문건을 채택할 경우 무력대응 등을 경고해 왔던 점과 비교해 상당히 온건한 입장임.

● “안보리 성명 北 6자회담 끌어내려는 타협”(7/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채택한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을 놓고 남북한이 모두 ‘외교적 승리’를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음. 한국 외교부는 의장성명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천안함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북한은 성명의 정신을 존중해 천안함 도발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음. 반면 북한의 신선호 유엔 대사는 “이 성명은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면서 “그동안 이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 왔다”고 주장했다.
-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끌어내려 한 한국과, 이 사건이 자신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180도 상반된 것이었음에도 그 결과를 놓고 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승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달 여간의 협상을 통해 한국의 요구와 북한의 주장을 모두 포괄해 버린 성명 내용 때문임.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합조



단 조사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내용과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성명에 모두 포함돼 있고 북한을 직접적 공격 주체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임.

- 이를 놓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성명이 북한을 핵 프로그램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서방과 중국 간의 타협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신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어떤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점과, 중국 외교부가 의장성명 채택 직후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 등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임. 미국측은 이번 의장성명이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주 말께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 기간 북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 신문은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했던 과거의 협상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음.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대니얼 사전트 교수는 “북한은 회담에 복귀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회담을 또다시 교착시켜 연기하는 이전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리 이후’..한반도 정세 어디로>(7/9)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가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음. 앞으로 양자 차원의 후속대응을 고리로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포스트 천안함’ 국면으로 이동하느냐의 갈림길임.
- 이에 따라 남·북·미·중을 주축으로 하는 관련국들이 안보리 이후 수순을 어떻게 밟아가고 이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세 흐름의 방향과 진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우선 안보리 대응을 주도해온 한·미·일 3자 공조의 움직임이 주목할 변수임. 지금까지의 기류로 볼 때 양국은 안보리 차원의 ‘상징적’조치가 마무리된 이상 한·미 동맹 또는 양자 차원의 ‘실효적 조치’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한·미 양국이 이달중 실시를 예고한 서해 연합훈련과 21일 한·미 외교·안보장관회의(일명 ‘2+2’회의)는 동맹 차원의 대응조치를 보여주는 핵심 이벤트들임.
- 특히 이 같은 동맹 차원의 움직임에 정부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음. 국민적 기대에 비해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안보리 조치를 ‘보완’하고 대북 압박의 흐름을 살려나가기 위해 고강도 대응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게 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임.
-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은 양자 차원의 금융제재 조치를 구체화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음. 이미 지난달초부터 양국은 다양한 경로로



- 다만 천안함 국면이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일정한 조정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측은 ‘선(先) 천안함 대응, 후(後) 6자 회담 재개’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자 회담 논의가 당장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임. 그러나 큰 흐름이 6자회담을 주축으로 하는 ‘포스트 천안함’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임.

● <안보리 ‘천안함 성명’ 전문가 진단>(7/9)

-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에 합의한 것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음. 일부 전문가들은 성명 초안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체 맥락에서 수용한 의미가 크다는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건 배후로 명확히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음.
- 우리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 등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적 감정이 풀릴 될 때까지 대북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음.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의장 성명 초안에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것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유엔 안보리가 일단 우리가 주도한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중국이 고심 끝에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60~70%는 인정할 듯한 뉘앙스를 주는 표현을 담았기 때문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다만 북한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 만큼 20~30%는 북한의 손도 들어주면서 체면을 세워주는 듯한 표현을 집어넣었다고 본다. 중국, 러시아의 기존 태도와 남북간 치열한 외교전 양상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초안을 채택한 것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이 훈련장소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의장 성명에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합훈련을 축소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한다. 예정대로 서해에서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띄워서 할지, 대잠훈련에 한정해서 할지, 아니면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포함해 제주 근해나 동해에서 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우리가 취한 대북조치는 예정대로 지속해야 한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 우리의 국민적 감정이 풀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조치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
: 이번 의장 성명 초안은 유엔 안보리 성격을 분명히 보여줬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타협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장이다. 이번 성명은 한국을 대변하는 미국과 북한을 대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이 절충된 산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초안에는 천안함 사건의 성격과 관련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그러나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점은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공격을 규탄하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균형된 입장을 보였다. 어쨌든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면 천안함 문제가 다자간 협의에서 양자문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남북이 다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 심화보다 적절한 수준에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천안함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한다. 다만 북한은 의장성명 초안이 이번 사건의 성격을 공격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이번 의장 성명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천안함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한 부분을 수용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탄은 아니지만 문구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우리가 주장한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우리 외교를 일정 정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안보리가 권고한 내용이 평화적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은 평화적으로 이 사건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작업을 끈질기게 해나가야 한다.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지적하고 천안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미 국가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를 분명하게 체득하게 됐다. 앞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경우 북한이 오는 9월 당 대표자회를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부적으로 체제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7월 말 이후부터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복원에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수 있다는 것이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의장 성명이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예상대로 나온 것 같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에게 재발방지 요구를 추구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인해 G8 공동성명보다 훨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명이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소행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입장인데 합의해준 것을 보면 어떤 균형점에서 성명이 도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례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도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보리 의장성명을 근거로 북한이 천안함 격침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제일 중시한 것은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의장성명이 북한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다. 증거 자체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안보리 절차도 끝났으니 보다 시급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유도로 가는 게 실용적인 대북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미동맹을 잘 유지해야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양자 차원의 제재는 하겠지만 향후 정책 6자회담 재개로 차차 움직일 수 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함 대응 조치에 계속 집중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조치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대화 재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 안보리 천안함 침몰 비난 성명 합의(7/9)

-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8일(이하 현지시간)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했음.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P5(상임이사국) + 2(한국·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이 문건을 회람했으며, 9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임.
-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음. 주요국이 합의한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지만, 명시적으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 하지만 유엔 관계자는 "전체적인 성명의 맥락에서는 북한의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음. 성명 초안은 또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요구



하면서도 북한 측이 주장해온 ‘우리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이 사건에 대한 남북 양측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면서 만일 안보리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문건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반응하겠다고 경고해 왔음. 이날 회의에서 초안 발표자로 나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 문건에 동의했다”면서 “안보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채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라이스 대사는 “이 문건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명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천안함 공격은 비난받아야 하며 한국을 향한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안보리의 판단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음.
- 그간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천안함이 공격 당했다는 것과 북한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한·미·일 등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 행위이므로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이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난항을 겪었음.
- 유엔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합의한 성명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대북 결의안이나 성명은 주요국 합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성명 채택을 방해하고 있고, 최근 안보리 주요국간의 협의가 전체회의에서 뒤바뀐 전례도 있어 내일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음.

● <안보리 의장성명 의미와 전망>(7/9)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조치가 의장성명으로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직접 북한을 책임주체로 적시하지 않는 ‘애매한 결론’이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북한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절반의 성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음. 외교전문가들은 안보리 대응조치가 최종순간 강대국들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귀결됨을 이번에 다시 확인해줬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국제사회가 명쾌하게 북한의 책임을 묻고 이를 한목소리로 규탄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민들의 기대치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번 의장성명은 ‘형식’면에서 국제사회가 천안함 공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음. 안보리 대응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컨센서스를 도출했기 때문임.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짐. 남·북·미·중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반영된 모호한 문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임. 우선 정부측은 전체적인 문



맥상 북한의 책임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난하는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음.

- 정부가 방점을 찍는 대목은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초안의 5항임. 이는 직접적인 형식은 아니지만 북한의 책임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정부의 시각임. 곧이어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7항으로 연결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임. 따라서 문안의 흐름으로 볼 때 천안함 공격의 책임이 있는 북한을 규탄한다는게 전체적인 취지라는 얘기임.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목을 포함시킨 것을 외교적 성과로 보고 있음.
- 4항은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돼있고, 8항은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런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외교가 일각에서도 당초 ‘공격(Attack)’이나 ‘규탄(Condemn)’이라는 표현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중국이 이번 문안에 합의한 것 자체가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 문안은 가장 핵심적인 대목인 ‘북한책임 적시’ 부분이 빠져있음. 공격의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정작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피함으로써 이번 성명이 갖는 ‘규탄효과’가 반감된다는 엄연한 평가가 뒤따름.
- 특히 6항에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북한의 입장이 반영됐다는게 냉철한 외교가의 평가임. 이렇게 볼 때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총력로비전을 펴온 한·미·일과 북한을 지목해 규탄하는데 반대한 중·러의 입장이 절묘하게 절충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음.
- 특히 ‘공격(Attack)’과 ‘규탄(Condemn)’이라는 표현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중국은 두가지 표현을 허용하면서도 북한을 특정해 규탄하는데에는 끝까지 반대해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일종의 중국의 ‘물타기 전략’이 어느정도 주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이번 안보리 대응조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정치현실을 재확인하고 우리 외교력의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국제 외교관계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안보리에 회부한 것 자체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中대사 “한반도 불씨에 기름부어선 안돼”(7/9)

- 허야페이(何亞非.55)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과 관련, “우리는 불씨에 기름을 부어 불이 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허야페이 대사는 8일(현지시간) 저녁 주제네바 중국대표부에서 가진 유엔 유럽본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중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비난한다”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 “중국정부는 어떤 나라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협상 절차에 진지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6자 회담 참여를 촉구했음.
- 그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양국 관계는 지금처럼 중요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두 나라가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힌 서해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음.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일부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위기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 역시 금융위기 과정에서 타격을 입어 수출과 고용이 감소했다”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1인당 GDP 등 질적 측면을 보면 확실한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며 “정부 지도자들은 매년 2천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두통을 앓고 있고, 홍수와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구만 매년 6천만~8천만 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경제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하며, G20뿐만 아니라 유엔 시스템 내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저장(浙江)성에서 태어난 허 대사는 지난 2008년 외교부 부부장에 발탁돼 미국, 홍콩, 마카오 관련 업무와 의전 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다 올해 제네바 대표부 대사에 부임했음.

● “한반도 정세, 中의 최대 외교현안” <중싱크탱크>(7/8)

-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취싱(曲星) 소장은 7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는 것이 중국 외교가 당면한 최대 현안의 하나라고 밝혔다. 취싱 소장은 이날 외신 기자들을 이 연구소로 초청해 가진 교류모임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천안함 사건이 타당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와 미중관계 등이 악화돼 한반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음.



- 취싱 소장은 이어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 계획에 대해 이는 중국 민중의 민감한 반응과 함께 남북관계, 한·중관계, 미·중관계를 종합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논평하고 이 훈련이 공해상에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천안함 사건과 서해합동훈련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관계 당사국들은 지혜를 발휘해 60년전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사고는 60년전 6.25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히고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로 나서면서 경제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남북이 중국적으로 긴장을 완화,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취싱 소장은 지난 5월에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천안함 사건과 3남 김정은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대한 논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싱 소장과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임.
-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공해상에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 민중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접국인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이번 훈련계획은 중국 민중의 반응과 함께 남북관계, 한·중관계, 미·중관계를 종합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서해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정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매년 군사훈련을 실시, 한반도에 긴장을 높여 왔다는 점을 한국은 생각해야 한다.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각은?
 - ▲중국 외교의 최대 현안의 하나이다. 타당한 선에서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동북아 안정은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천안함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와 한중·미중관계에 갈등이 커져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보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은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관련 당사국들이 외교적 지혜를 모아 60년전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6.25 60주년을 맞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에 변화가 있나?
 - ▲중국은 6.25에 참전한 대가가 컸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초래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외교수립이 약 20년 늦어졌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이제 한국과 수교, 교류와 소통이 길이 열려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로 나서면서 경



제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 남북이 중국적으로 긴장을 완화,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를 바란다.

- 미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면 중국은 군사행동을 할 것인가?
▲모르겠다. 내가 말할 입장이 못 된다.
-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5월 방중했을때 중국측과 천안함 사건과 3남 김정은의 권력 승계에 대해 논의를 했나?
▲김 위원장의 방중은 천안함 사건이전에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방중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의 방중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3남 김정은의 후계자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누가 지도자가 되던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했을 당시 조기 붕괴론등 온갖 억측이 나돌았으나 정권이 15년이상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 “천안함 서방 대응책 극히 제한적”<FT>(7/7)

-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7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서구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음. 이 신문은 ‘극단적 왕조(Drastic dynastics)’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공격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북한은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 잠수정의 공격이라고 결론을 냈다”면서 “미국은 천안함 공격이 긴장 고조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했으며 한반도 전 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3년 늦췄다”고 전했다.
- 일본과 한국은 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할 경우 북한 정권이 무너져 대규모 난민 사태와 북한군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음. 이 신문은 북한이 갑자기 냉전시대의 호전적 전술로 되돌아간 이유에 대해 “김정일이 장악력과 판단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국내 경제 실패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는 두 가지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백악관 “유엔성명은 대북경고..北고립 가중”(7/10)

- 미국 백악관은 9일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북한의 고립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음.
-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공격적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해머 대변인은 “만장일치의 이번 성명은 6자회담 5개 참가국의 공유된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에 이번 공격의 책임이 있다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호전성에 직면해 대한민국이 보인 절제를 평가하며,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공약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이번 성명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北, 억류 미국인 고프즈 석방하라”(7/10)

- 미국은 9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의 상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프즈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 “고프즈씨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석방하라는 우리의 주장을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 토너 부대변인은 “우리는 그(고프즈)의 안녕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프즈 가족의 사생활 보호 요구를 이유로 고프즈가 자살을 기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고프즈가 죄책감과 구원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는 미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서 최근 자살을 기도했고 현재 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프즈는 지난 1월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뒤 4월 재판을 통해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美 “유엔성명 강력, 대북메시지 명확”(7/10)

- 미국은 9일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 채택을 환영하면서 이번 성명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정당화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성명은 강력하며,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성명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일치되게 규탄했고,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정당화시켰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성명 채택 뒤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라이스 대사는 “이번 성명은 이번 공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안보리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개탄하는 한편 추가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한국전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전문가 “대북 선제공격론 반대”(7/8)

-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잭 프리처드 소장은 7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KEI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최근 공개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정책보고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 선제공격론이 거론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프리처드 소장은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당시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 대포동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것에 자신은 반대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 프리처드 소장은 만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뤄진다면 남한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동맹인 미국이 선제공격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의 공동저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서에 언급됐을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또 한명의 공동저자인 존 킬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기가 이뤄졌다는 점은 한미 동맹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움직일 수 없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60여년에 걸쳐 개선돼 왔으며, 세계적으로 볼 때 특별하고 모범적인 동맹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리처드 소장 등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3명은 미외교협회(CFR)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 한반도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참여했다.
- 프리처드 소장 등은 8일 국무부를 방문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북핵특사를 만나 보고서에 담긴 한반도 관련 정책제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다. 중·북 관계

● 中언론, 천안함 규탄 안보리 성명 신속 보도(7/10)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이를 논평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했다.
- 통신은 뉴욕 유엔본부발 기사에서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이 성명에는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결과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측 입장도 언급됐다고 소개했다.
- 통신은 리바오둥(李保東) 유엔주재 중국대표가 의장성명이 통과된 후 남북대화와 협상을 희망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했음. 북측 입장에서 대중 수입은 7억2천719만2천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9.0% 증가했지만 수출은 2억5천643만8천달러로 4.9% 줄었음.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4억7천75만7천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0% 확대됐음.

-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경협과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액 기준 북한의 최대 대중 수입품은 원유로 25만4천t을 기록해 전년 동기의 24만7천t보다 소폭 증가했음.
- 그러나 금액기준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1억5천709만7천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무려 76.0%나 급증했음. 특히 쌀(2만4천400t), 옥수수(3만1천400t), 콩(2만500t), 밀가루(3만4천t) 등 주요 곡물 수입은 11만3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늘어났음. 비료 수입도 8만1천943톤으로 전년 동기의 3만8천4톤에 비해 115.6% 급증했음.
- 곡물과 비료 수입 증가는 최근 악화 우려가 일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것으로 보임. 역시 금액 기준으로 항공유(46.8%↑)와 화물자동차(98.7%↑), 자동차 휘발유(47.4%↑), 유연탄(137.0%↑) 등도 수입이 증가했음.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는 철광이 4천394만5천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1.6%나 증가하며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했음. 이에 비해 무연탄 수출은 4천106만달러로 전년보다 66.3% 급감했음.

라. 일·북 관계

● 中주재 일본 공관, 탈북자 10여명 보호(7/8)

- 주중 일본 대사관 등 중국에 있는 일본 공관이 탈북자 10여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출국 허가를 내주지않아 일본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는 10여명이며, 이들은 재일동포 등으로 1959~1984년 이뤄진 북한의 '재일동포 북송사업' 당시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사람들임.
- 아사히신문은 이들이 모두 일본으로의 귀환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 탈북자를 일본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에 '앞으로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음. 탈북자들은 베이징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선양의 총영사관 등에 분산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일본 공관은 탈북자 백수십명의 망명을 받아 일본에 입국시켰음. 일본 정부는 자국 출입국관리법상 일본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전 재일 한국인이나 북한인, 이들의 3촌이내 가족 탈북자에 한해 인도적 입장에서 보호해왔음.
- 중국 정부는 외국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출국을 허용하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태도를 돌변해 출국을 허용하지 않



고 있음.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탈북자 출국은 작년 7월 수술이 필요한 임신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됐으나 그 외의 탈북자는 일본 공관에 발이 묶여 있음.

마. 기 타

● 이스라엘 대통령 “북한은 핵 면세점”(7/10)

-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북한을 ‘핵 면세점’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페레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설비를 파는 면세점’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은 이란에, 이란은 시리아에, 시리아는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것으로 추측되는 핵 시설을 공격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페레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가능성을 일축하며 자국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적이 없다고 말해 핵 보유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을 재확인했음. 지난 5월 말 발생한 가자지구행 구호선 공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군의 정당방위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며 하마스가 총격과 위협을 멈추는 순간 가자지구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음.

● 유럽의회,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7/8)

- 5억 명 유럽연합(EU) 인구를 대표하는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대(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음. 지난달 17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주 만이며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은 2006년 6월 이후 4년 1개월 만임. 유럽의회는 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계속된 7월 정례 본회의의 마지막 날인 대북 인권결의안을 상정했으며 6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64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음.
-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이 재판에 의하지 않은 살인, 임의구금을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결의안은 또 “위성사진과 복수의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6곳의 수용소를 설치해 15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고 지적했음. 유럽의회는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은 즉각적이고도 영구적으로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음.
- 결의안은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수용시설을 조사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는 항목도 담았음. 유엔의회는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 “탈북자 검거 및 북한 송환을 중단하는 한편, 북한 주민 삶의 조건과 사회적 권리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촉진하도록 하라”고 압박했음.

- 유엔의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대해서도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에 개성공단 내 근로자 권리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조항을 담도록 하라”고 주문했음. 한편,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우파 보수 개혁(ECR) 그룹 소속의 찰스 태닉(영국) 의원은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려면 북한 정권이 교체돼야 하고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됐음.

● “유엔, 北관련 납치 조사중·연내 보고서 작성”(7/8)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현재 북한이 연루된 ‘강제적 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권고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북한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
- 이 실무그룹 사무국은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25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폐막한 연례회의에서 북한, 칠레, 중국, 이라크 등 26개국과 관련된 ‘강제적 실종’(납치) 170건이 새로 접수됐다”면서 “현재 해당 국가들에 현장조사 협조와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이들 사건을 검토한 뒤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무국은 북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북한 정부가 수사 기록을 보내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긴급행동 절차’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국은 “그러나 작년에도 여성 5명이 포함된 9건의 북한 관련 ‘강제실종’ 사건이 접수됐지만 북한 정권의 비협조로 ‘미결’ 처리됐다”면서 “북한은 작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알려왔지만 실무그룹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의문 사항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지난달 17일 “1969년 KAL기 공중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황원(생존시 73세) 당시 영동MBC PD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1970년대 남미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빈발한 납치와 실종 사건들을 계기로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납치 관련국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에 ‘납치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보고해, 국제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음.



● 브레겐만 “안보리 대응,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7/6)

- 더크 브레겐만 나토 사무국 정부·안보정책담당 사무차장보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 결의나 의장성명과 같은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브레겐만 사무차장보는 이날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가 보통 더 강력한 조치이지만 의장성명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나토 대변인이 지난달 20일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나토의 강력한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겐만 사무차장보는 “나토 회원국 중 일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기는 하지만 안보리에는 다른 국가들도 있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지지를 얻어 결국에는 모든 국가가 합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과 관련, “아프간은 병력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사례”라며 “최근 공식 활동을 개시한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지방재건팀(PRT)은 민·군·경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나토와 일정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가’(a like-minded country)”라며 “아프간 재건과 소말리아 해적 퇴치 등이 군사 분야 협력의 가장 좋은 예로 앞으로도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 등에서도 계속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브레겐만 사무차장보는 나토가 오는 11월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신전략개념’에 대해 “유럽과 북대서양을 기반으로한 나토의 전통적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역외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그는 “다만, 나토는 전 세계의 경찰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략적 관점에서 나토가 혁명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밟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또 나토가 미국과 함께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러시아측도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레겐만 사무차장보는 이날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을 예방한 뒤 이윤 정책기획국장과 제3차 한·나토 정책협의회를 열고 나토의 신전략개념과 한반도 및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주요 국제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7월중 목표로 서해 연합훈련계획 수립”(7/10)

- 한국과 미국은 7월 중 실시를 목표로 서해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 일환으로 검토 중인 한·미 서해연합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훈련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할 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양국은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9일 열린 제26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7월 중으로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쉬퍼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SPI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와 앞으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라 우리 측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부대구조 개편시기 및 전력증강 계획 등을 설명했다”면서 “이에 따른 미측의 요구 사항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 또 SPI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인 ‘2+2회담’의 의제 및 준비사항도 협의했다. ‘2+2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주로 협의될 예정이며 미래 공고한 한미동맹 의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SPI회의에서 양측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동맹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서울 ‘2+2회담’에 참석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회담에 앞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내 6.25전쟁 전사자 명비를 처음으로 동시에 참배하고 헌화하는 등 전사자들을 추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미 군당국 “美7함대 작전구역에 서해 포함”>(7/8)

- 군당국과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8일 중국이 미 7함대 전력이 서해로 이동해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미 7함대의 작전구역에는 서해도 포함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서태평양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미 7함대의 작전구역에 한반도의



서해와 동해, 남해 등 우리의 관할수역이 포함된다"는 것임.

-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미 7함대의 작전구역에 서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전력들이 서해로 전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미 항공모함이 서해로 전개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항공모함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서해상의 지형 특성상 서해에 있는 항구에는 정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7함대 소속 이지스구축함이 서해 평택과 인천항을 방문했고 태안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실제 한·미는 지난 3월 천안함 피격 직전 백령도 사고 해상에서 남쪽으로 170km 떨어진 태안반도 해상에서 미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 참여한 가운데 키 리졸브연습 일환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도 했음. 또 중국이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 것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 나라의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양국 영토를 오가며 반테러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했지만 어느 나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이 관계자는 “한·미가 서해 연합훈련 일정과 참가전력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음.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훈련 시기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백악관 “한미 FTA 자동차조항에 우려”(7/8)

- 백악관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해결 쟁점 사안 논의 대상에 자동차 문제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음.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 제기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우리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한미 FTA에 포함된 일부 자동차 조항에 우려를 갖고 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수년전부터 그런 우려들을 열거했었다”고 밝혔음.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가 미해결 이슈들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이 협정의 일부 자동차 조항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토론토에서도 (한국측과) 얘기를 했다”고 말했음.
- 이런 언급은 미국이 예상대로 한국과의 FTA 추가 논의를 벌일 경우 자동차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로 들고 나올 것임을 분명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기브스 대변인은 “내년 초 한국과의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희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11월 서울 방문에 앞서 우리가 보기에 해결될 수 있고 해결돼야 하는 미해결 이슈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가기에 앞서 미해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덧붙였음. 그는 이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 체결한 FTA협정 중 어느 하나라도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열릴 미 의회의 ‘레임덕 세션’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가능하다고 확실히 믿는다”고 답했음.

- 그는 하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미해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까지 절치는 끝날 수 없다”고 말했음. 앞서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트레이드는 미 정부 당국자들이 업계와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접근에 초점을 맞춘 ‘한정된 변화들’을 추구할 의도를 밝혔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음.

● “주한 美기지 이전시기·비용협상 연말께 타결”(7/8)

- 서울 용산과 경기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기와 비용부담 등의 협상이 연말께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연말께 타결을 목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작년 중순부터 양측이 막혔던 부분을 급속히 해결하면서 PMC(주한미군기지 종합사업관리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을 연말께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PMC는 지난 2008년 12월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미 2사단은 2016년까지 이전하는 일정을 제시했음.
- 이 고위 관계자는 PMC에 명시된 기지 이전시기 수정과 관련, “용산기지는 2015년까지, 미 2사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평택으로 각각 이전할 것”이라며 “미측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2사단 이전 시기에 대해 한국측이 원하는 시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음.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우리 측의 부담규모는 부지매입비 1조원을 제외하고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초기에 판단한 비용부담 수준에서 크지는 않지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률과 소요 누락분 등을 감안하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미측은 자체 용역기관을 통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C4I체계 시설의 이전비용과 장비 수준 및 가격 등을 평가했으며 C4I체계 검토 인력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측은 용산기지의 C4I체계 이전 비용과 장비 가격 등을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됐었음.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에 있는 C4I체계 이전과 관련해 미측에서 요구가 많았다”며 “미측에서 용역기관의 자료를 우리측에 전달하고 평가 인력도 보강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미측은 우리측에 기지이전 공사와 관련해 추가로 요구한 것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양측이 작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해



그간 진척되지 않았던 분야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께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하원의원, 주한미군 철수론 제기>(7/8)

- 바니 프랭크(민주.매사추세츠) 미 하원 금융위원장은 7일 국방예산 삭감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펼치면서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랭크 의원은 이날 자신의 국방지출 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한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유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방위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미국에 자신들의 방어를 의지하면서 국방비에 투입할 돈을 국내 복지 등에 돌려쓰고 있다면서 유럽, 일본, 오키나와 등 해외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프랭크 의원은 ‘한국에서도 역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보다 더 크고, 더 부유하다”면서 “한국은 스스로의 지상군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무장한 미치광이 중 한 곳과 맞서있고, 북한은 많은 무기를 가진 미치광이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라고 지적한 뒤 “북한이 공격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해·공군력으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한·미 연합훈련 실시, 자주적으로 판단”(7/8)

-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8일 중국 정부가 한·미 양국의 서해 연합훈련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이번 훈련은 천안함 사건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우리가 자주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합훈련의 성격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로서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연합훈련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군 당국간에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다”고 답했다.

● 中언론 “한국 서해훈련 재고해야”(7/8)

- 중국 관영언론들은 8일 한·미 서해합동훈련이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직접적으로 피력했다. 지난달 이번 훈련 계획이 발표될때부터 우려의 시각을 보여온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한미서해군사훈련 축소될 수도’라는 제목아래 이번 사태를 1면 전면에 이어 6면에 걸



쳐 장문의 기사로 처리하고 사실을 통해 한국에 이번 훈련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음.

- 이번 훈련계획으로 인한 사태 진전을 ‘서해(중국명 황해) 위기’라고 명명한 이 신문은 ‘누구도 황해를 교란하는 죄인이 되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사실에서 한국에서 이번 서해군사훈련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 보도가 사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사실은 한국이 북한을 위협하려고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했다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오히려 통제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한국이 안보를 미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 자신의 전략적 시야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사실은 한국 정부가 한달전 이번 훈련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훈련장소가 중국 수도에 인접한 해상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고의로 터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음. 사실은 이어 한국이 자신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을 잠재 대상으로 삼는 서해훈련을 계획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서해위기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해 파괴력이 더욱 크며 동북아를 군사 대결의 위기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음.
- 사실은 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한국이 앞으로 서해에서 불리한 소식만이 들려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합동군사훈련 재고해야’라는 제목의 사실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고 한국 정부가 보다 큰 비전과 불필요한 군사행동에서 발을 빼면 중국과 다른 국가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중국의 한반도전문가인 뤼차오(呂超)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번 서해훈련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 항공모함을 훈련에서 빼는 등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음. 또 중국 해군연구소전략연구원인 귀야둥(郭亞東)은 이날 환구시보에 기고한 평론에서 중국은 한미가 서해에서 훈련을 하면 해군력을 공해상에 파견, 맞대응으로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예상외의 수확을 거둘수 있다고 주장했음.

● 中언론 “韓, 서해훈련으로 中에 압력” 주장(7/7)

- 한국이 서해 군사훈련을 이용해 중국에 터무니없이 함부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주장했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이 같은 제목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들을 비판하고 나섰음.
- 신문은 자국 전문가를 인용,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건 처리 결과를 본 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



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음.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 한국연구센터 스위안화(石源華) 주임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으면 미국 항공모함을 서해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음. 스 주임은 “천안함 사건은 중국의 책임과 무관하지만, 서해 군사훈련은 중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한·미 양국이 한국의 난제를 중국의 이익과 연관지어 처리하는 것은 매우 우호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음.

- 신문은 한국군 당국은 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조치 이후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도 전했다.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음.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한치의 입장 변화도 없는 중국에 실망했다”, “중국이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로 바뀌고 있다”, “중국 언론이 자국 정부에 군사 훈련에 대응해 더욱 강경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통해 중국에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임.
- 신문은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서 24시간 거리에 있는 일본 기지에 주둔시키는 등 군사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음. 이와 관련 중국 해군의 인취(尹卓) 소장은 “중국군은 서해의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의 연안 경제의 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언론들을 인용, 일본의 여론은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계획이 자국뿐 아니라 일본의 여론으로부터도 곱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임.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한·미 군사훈련 계획이 알려진 뒤 잇따라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 “중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중 韓 최다”(7/8)

- 중국 내에서 체포, 구금된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음. 주(駐) 중국 한국대사관 측은 8일 “연변지역의 한 중국 법원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포함해 지난 3월31일 현재 중국 내에서 마약으로 인해 체포됐거나 수감중인 한국인이 86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이 공개했음. 중국은 역사적으로 아편전쟁을 경험한 탓에 마약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엄벌하며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유통, 소지했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국제적인 기준보다 세다는 지적을 의식해 한 때 처벌 강도의 완화를 검토했다가 최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영국인 마약사범 아크말 샤이크(당시 53세)씨를, 지난 4월에는 다케다 데루오(武田輝夫, 67)씨를 포함해 일본인 3명을 마약밀매죄로 사형시켰음. 2001년에는 마약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신모씨가 중국에서 사형됐으며 북한 마약사범 1명도 중국에서 재판을 통해 사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내 한국인 마약 거래는 주로 동북3성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지린(吉林)성 지역이 근래 중국내 최대 대마 재배지역으로 떠올라 국제적인 마약벨트가 형성됐다는 지적임. 주중 대사관 측은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구하지만 사법주권 침해라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러울 뿐더러 자칫 반한 감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음.

● “中, ‘한미 연합훈련’ 반대입장 우리측에 전달”(7/7)

-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이달중 서해상에서 실시하기로 한 연합훈련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7일 알려졌다.
-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측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입장을 전달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중국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세를 긴장시키고 이 지역(동북아시아)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이미 유관 당국에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이 그 같은 메시지를 우리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중간에 상호 관심사에 의견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이번 연합훈련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훈련이며 ▲방어적 차원의 행위이고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위훈련”이라며 “현재 여러가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래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가졌으나 당국자들은 “연합훈련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 <중국한상대회> “한·중 관계개선 디딤돌”(7/7)

-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가 7일 저녁 참가자 환송 만찬을 끝으로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음. 대회 참가자들은 8일에는 대회 개최지인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주요 산업시설들을 시찰하게 됨. 한·중 대표단은 이날 만찬에서 한목소리로 “중국 한상대회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경제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신형근 주(駐)선양 한국총영사는 “이번 대회 기간 30여 개의 다양한 경제, 문화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국과 중국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평가했음. 그는 “선양은 중국 제4의 성장축으로 떠오른 동북 3성의 핵심 개발축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요 거점도시”라며 “중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의 성공이 양국간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음.
- 박근태 중국한국상회장은 “1천200여 명의 세계 한상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며 “선양을 무대로 한 한상들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한·중 경제 협력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친원진(秦文軍) 선양시 부비서장은 “선양은 오랜 기간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질적 성장을 이뤄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많은 한상들이 선양에 관심을 갖고 중국 기업인들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상생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음. 참가자들은 공식 행사에 이어 열린 공연을 관람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음.

다. 한·일 관계

● <日 선거 결과, 韓·日 현안에도 영향 줄 듯>(7/11)

- 일본 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한·일 외교 현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민주당은 그동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외국인 참정권 부여, 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전후 보상처럼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검토해왔음.
- 이중 한·일 FTA는 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 내에서 논란이 큰 외국인 참정권이나 전후보상 등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참정권 부여는 재일동포 등 영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내용임. 국수주의적 색채를 띠는 일본의 일부 보수 언론은 선거 직전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부부별성제(別姓制)와 인권침해구제법안, 외국인참정권 부여 법안 등 ‘3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수 표심을 자극했음. 외국인참정권



부여 법안이 그만큼 일본 안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함.

- 지난해 8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도 망설이다 법안 제출을 뒤로 미룬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전후 보상도 마찬가지임.
-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전에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에게 사실상 보상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희망을 키웠고,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도 최근 “정치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침을 만들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건도 있다”며 한국·중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보상 가능성을 언급했음. 하지만 이런 법안들도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음.
- 다만 이같은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민주당이 앞으로 새 연립파트너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인 공명당이 외국인 참정권 부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한·일 현안도 연립여당의 개편 방향에 따라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주일대사 “일 관방장관 발언 전향적”(7/8)

- 일제시대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문화재 반환 가능성을 시사한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8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의 ‘전후처리’ 언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당히 전향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일본이 내달 광복 65주년이나 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관련해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는 새로운 총리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참의원(상원)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음.
- 권 대사는 또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뭔가 (한일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음. 재일동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간 나오토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적극적인) 민주당의 기본자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 한편 재일한국인 교육 문제와 관련해 “도쿄 한국학교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 대기 학생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오사카 건국학교도 건물을 지은 지 40여년 이상 지나서 내진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려면 내년 정부 예산에 우선 설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연합시론> 일 관방장관 ‘전후처리’ 발언에 주목한다(7/8)

- 일본 내각의 2인자이자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됨.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7일 외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의 개인청구권에 대해 “법적으로 끝났다”고 했다가 관계가 나빠진다면 정치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침을 만들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건도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나아가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자의 유골 반환 문제와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 문제, 재한(在韓) 피폭자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하나씩 하나씩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인이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함. 발언내용만 놓고 보면 한국과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마침내 문제를 풀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함. 우리가 센고쿠 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협정) 체결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음.
- 이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개인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해왔음. 하지만 센고쿠 장관은 “정치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개인 보상의 길을 정치적으로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음. 최근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강제노동한 일본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베리아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고 함.
-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국민인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해서도 법적 보상 책임을 부인해왔음.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후 태도를 바꿔 억류자 개인에게 23만~150만엔의 특별교부금을 주는 법률을 만든 것임.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센고쿠 장관의 발언은 일본정부가 오는 11일 참의원 선거 이후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등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함.
- 하지만 센고쿠 장관의 발언이 일본강점기 강제징병, 징용자, 피폭자들에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임. 무엇보다 그의 발언이 동료 관료 및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인지, 그리고 법률적 사항까지 검토가 돼서 나온 것인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임. 한국인 징용자 등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치법 등 의원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함.
- 입법과정에서 민주당 내 의견통일은 물론이고 관료들과 야당의 반대 등 저항이 거셀 수 있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관방장관의 발언만을 믿고 희망을 가졌다가 막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큰 실



망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일본 민주당 정부가 안팎의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강한 지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임.

- 마침 올해는 한일병합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한국인이 납득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함. 센고쿠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이면서도 일관된 노선이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구되길 기대해봄.

● <유외교, 시게이에 日대사에 위로 전화>(7/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저녁 초청 강연 중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8일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유 장관이 시게이에 대사에게 발생한 사건 소식을 듣고 어젯밤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면서 “유 장관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이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독도수호 시민단체의 한 회원이 강연 중이던 시게이에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시게이에 대사가 급히 자리를 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및 직원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통위, 日과 주파수이용 조정 협력(7/8)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일간 전파간섭 현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 당국과의 협력을 정례화하기로 했음. 오남석 전파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통위 대표단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방한중인 요시다 야스시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 등 5명과 신라호텔에서 협의회를 열어 양국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방통위가 밝혔다.
- 한·일 양국은 700MHz와 2.5GHz 등 주요 주파수 대역과 DTV 채널 등 주요 방송통신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임. 이외에도 양국은 ▲ICT 조직 및 전파정책 현황 ▲세계 전파통신회의(WRC) 등 국제기구 ▲한일간 주파수 조정 현황 ▲전파감시 협력방안 등서 협력을 강화함.

라. 미·중 관계

● 中 “구글 인터넷 영업허가 갱신”(7/11)

- 중국 관영 언론이 자국 정부가 구글의 인터넷 영업 면허를 갱신했음을 11일 확인했음.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리를 인용, 주무부처인 공업정보화부가 구글 차이나의 인터넷영업허가



(ICP) 갱신 신청을 심사를 통해 승인했다고 보도했음.

- 이 관리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구글 차이나의 운영자인 구상(谷翔)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가 지난달 말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이 회사가 중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 영업면허를 갱신했다”고 말했음.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도 이 부처 관리와 인터뷰를 통해 허가 갱신 사실을 전하면서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의 영업면허 갱신 기업 명단에 허가번호와 함께 구상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 이로써 구글은 2012년까지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이 허가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상황임. 중국 언론의 확인보도가 나가기 전인 지난 9일 구글은 이메일과 블로그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ICP를 갱신받았으며 “중국 내에서 웹 검색 및 지역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중국의 검열과 해킹공격 등을 이유로 중국어 검색 사이트(google.cn)의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대신 이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홍콩 사이트(google.com.hk)로 연결되도록 했음. 그러나 우회 서비스에 대해 지난주 중국 정부가 인터넷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거부감을 보이자 구글은 지난달 30일 ICP 갱신 허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우회 서비스를 중단하며 ‘새로운 접근’(new approach)이란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음.
- 구글은 구상 테크놀러지 명의로 영업 면허 갱신을 신청하면서 중국 정부의 통신관련 57번 규정에 명시된 대로 중국 법을 준수하고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 인터넷 검열과 해킹 피해 등으로 촉발된 구글 사태는 미·중 양국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졌으나 이번에 구글의 중국내 영업 허가증이 갱신됨으로써 잠잠해질 전망이다.

● 美고위당국자 “中 천안함성명 동참 매우 중요”(7/10)

-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9일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을 ‘북한의 패배’로 규정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이 일치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 의장성명 채택의 가장 강력한 의미라고 밝혔음.
- 익명을 요구한 벅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장성명 채택의 의미와 내용을 전하면서 “문구보다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간의 일치(unity)가 있었다는 점이 이번 의장성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모두가 (의장성명에) 동의하고, 북한에 의한 이번 공격을 규탄했다”면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P-5)이 분열될 수 없었다”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이번 성명 채택은 한국 외교가 거둔 의



- 소식통은 “그 같은 점으로 미뤄 한미 양국으로선 중국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음. 한미 양국은 일단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면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임. 이미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6일 한미 서해상 합동훈련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계획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럼에도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건 결정이 이뤄지면 미 7함대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 등의 항모 전투단을 서해로 파견해 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협의중이지만 아직 상황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미 서해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입장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임.
 - 중국은 지난달부터 환구시보 등의 관영매체를 동원해 서해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혀온 데 대해 한미가 세 차례나 훈련 시기를 연기하는 등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참에 아예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천명하는 방식으로 한미를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임. 중국은 한미 서해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잠수함의 대남 침투방어는 말 그대로 ‘명분’이고 항모 전투단을 동원해 중국을 겨냥한 공격 훈련 내지는 중국내 안보정보 파악을 하려는 게 속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작전 반경이 600~700km인 조지 워싱턴호 등의 항모 전투단에 베이징(北京)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모조리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말 그대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임.
 - 그런 탓에 중국은 최근 서해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부근에서 무력 시위성 군사훈련을 했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미사일·유도탄 발사 장면이 포함된 훈련내용을 편집 공개하는 등 서해 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 왔음.
 - 이와는 달리 중국의 한미 서해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안보 위협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중국이 세계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국제적인 정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해로 그 세력을 급팽창하려는 ‘굴기’를 본격화한 행동으로 비친다는 것임.
 - 실제 최근 몇달새 중국은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적인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을 체결해 중국-홍콩-마카오-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의 기틀을 마련했는가 하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해상경계 강화에 나서는 등 패권주의적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임. 해석이야 어떻든 간에 중국이 ‘서해 군사훈련 반대’라는 한미 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던짐으로써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미중 양국의 경우 올초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결정으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해 군사훈련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중관계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임.



- 특히 공산당 기관지 계열인 환구시보가 7일자 1면 전면기사에서 “한국이 서해 군사훈련으로 중국에 터무니없이 함부로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의 헤드라인으로 한국을 전면 겨냥해 관심을 모았음. 베이징의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단 중국의 서해 군사훈련 반대 선언으로 한·미·중 간에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컨대 항모가 동원되지 않는 선에서 중국 당국이 한미 양국의 서해 합동군사훈련을 용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음.

● 中 “한미 서해훈련 반대” 공식선언(7/8)

- 중국 정부가 8일 공식적으로 한·미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반대를 선언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음.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서해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는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이미 유관 당사국들에 이에 대한 엄중한 관심과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중국이 이미 한국과 미국 등 당사국에 서해 훈련에 대해 사실상 반대 또는 항의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의 입장이 한국 측에 전달되긴 했지만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한국 정부에 직접 항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인민해방군 수뇌부가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각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부는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천명하지는 않았었음. 마샤오펜(馬曉天) 부총참모장은 최근 홍콩의 봉황(鳳凰)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과 인접한 황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음.
- 친 대변인은 앞서 6일 브리핑에서 마 부총참모장의 발언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은 자리에서도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세를 긴장시키고 이 지역(동북아시아)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회적인 반대 입장만을 표명했었음. 그러나 중국이 이날 밝힌 반대 입장은 중국의 최근 조치를 감안할 때 사실상 예고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중국은 최근 서해 훈련이 실시될 부근에서 무력시위성 군사 훈련을 했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미사일·유도탄 발사 장면이 포함된 훈련내용을 편집 공개하는 등 서해 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왔음. 친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서해 훈련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관 각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한편, 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도 내비쳤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론 중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그는 “현재 이사국들이 안보리에서 통과시킬 문건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음. 그는 “우리의 입장은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란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중국은 이를 위해 당사국들과 대화와 소통을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美-中 산업스파이 공방 장기화할듯>(7/7)

- 중국 당국이 자국계 미국인을 국가기밀정보누설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양국간에 산업스파이 공방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 미국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면서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 미중 양국간 산업스파이 공방은 지난 5일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이 지질전문가인 미국 국적의 쉘핑(44·薛峰)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0만 위안을 선고하면서 촉발됐음.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컨설팅회사인 IHS사의 직원인 쉘핑이 중국의 석유산업 관련 정보를 빼돌려 미 기업에 넘기려 했다는 것임.
- 쉘핑은 중국 태생으로 시카고대학으로 유학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아직 가족과 친척이 중국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쉘핑이 체포됐던 2007년 11월 이후 조사과정에서 재떨이로 머리를 맞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가족이 조용한 해결을 원했던 탓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왔으나, 예상 밖의 선고가 내려지자 본격적인 ‘액션’에 돌입했음. 미 정부는 특히 쉘핑이 문제가 된 자료들의 경우 애초 상업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들이었고 자신이 구매한 다음에야 국가기밀로 분류됐다고 항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 당국이 국가기밀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어 보임.
- 존 헨츠먼 주중 미국 대사는 이례적으로 재판에 참관한 후 “매우 실망스럽다”며 “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쉘핑을 즉각 석방하고 국외로 추방하라”고 촉구했으며 주중 미 대사관 측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 중국 정부를 압박했음. 그러자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중국의 내정이자 사법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고 맞받았음. 친 대변인은 쉘핑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관영매체들도 쉘핑에 대한 재판 결과와 함께 미 정부의 반발을 자세히 전하면서, 자국 정부의 결정에 동조하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음. 중국의 그런 대응에 이번에는 미 국무부의



마크토너 부대변인이 공박하고 나섰음. 토너 부대변인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5일 “중국 당국의 (체포와 구금, 재판 등) 일련의 절차에서 쉘핑 박사의 권리에 대해 극도의 우려감이 든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쉘핑 박사를 즉각 석방해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촉구했음. 그는 그러면서 “미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쉘핑 박사 석방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 “美항모, 서해진입하면 과녁된다”<中장성>(7/6)

- 중국은 미국이 항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중국명 황해)에 파견, 한국과 합동훈련을 하는 계획에 강력 반대하지만 이 항모가 서해에서 훈련을 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란 경고가 중국 군부에서 나왔음.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인 뤼위안(羅援) 소장은 5일 홍콩 TV방송인 봉황위시(鳳凰衛視)의 ‘오늘의 뉴스 대답’ 프로에 출연, 중국은 이 항모의 서해 진입을 겁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 뤼위안 소장은 이 항모가 서해에서 한국과 합동 훈련을 벌이면 이는 오히려 중국이 자국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미국 항모의 작전능력을 파악하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해방군은 우선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진입에 대한 자국군의 정찰능력과 감지시스템의 작동, 그리고 원거리 전산 시스템 등을 검증하고 이 항모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강력한 타격을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임.
- 해방군은 또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 미 항모를 훈련 파트너인 청군(靑軍)으로 삼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항모를 주축으로 한 미국 함대의 작전능력과 작동 시스템, 해상 포진 등을 탐지하는 기회가 생긴다고 뤼 소장은 강조했다. 뤼 소장은 중국군은 특히 ▲조지 워싱턴호의 C4IS R 시스템 ▲미군의 한국군과의 통신 시스템 ▲미 항모의 포진과 위치 선정 등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음.
- 뤼 소장은 중국이 이번 한·미 해상합동훈련을 반대하는 이유로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과 요동반도가 미 항모 작전권에 포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위협 ▲중·미 군사교류에 악영향 등 4개를 들고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탐지하고 해방군 해군과 잠수함 부대를 꼼짝못하게 묶어두는 작전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분석했음. 중국군 당국은 한미 서해합동훈련계획에 대한 입장을 봉황위시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 앞서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마샤오텐(馬曉天) 부총참모장이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이 TV와 인터뷰에서 이번 훈련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한 관계자의 말은 인용, 이번 서해 훈련



은 아직 계획단계이며 항모의 참가, 훈련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마. 미·러 관계

● 美, 러 스파이 10명 추방..맞교환 즉시 집행(7/9)

- 미국과 러시아가 스파이 맞교환 합의사항을 즉시 실행에 옮겼음. 10명의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활동하다 최근 체포된 러시아 스파이 10명이 뉴욕을 출발, 모스크바를 향해 떠났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음. 이들은 전세기편을 이용해 모스크바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러시아 당국이 스파이 맞교환을 합의한 당일 10명의 러시아 정보요원들이 뉴욕의 맨해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지 몇 시간 만에 전격 단행됐음. 이들 러시아 정보요원은 이날 맨해튼 법원에서 구금된 일수만큼만 형을 선고받고 추방명령을 받았음.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된 러시아인 4명을 사면하는 대통령령에 이날 서명했음.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모스크바의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 이고르 수티아긴은 항공편으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스파이 맞교환은 미국과 러시아간 관계개선이라는 분위기속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음. 미국 정부도 신속하고도 실용적인 스파이 맞교환은 미국과 러시아간 관계진보를 의미한다고 화답했음.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은 PBS 방송에 출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맞교환 결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음. 미국과 러시아 당국은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러시아 스파이 10명 전원과 서방국가를 위해 활동하다 러시아에 수감된 스파이 4명을 각각 풀어주기로 이날 합의했음. 이로써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스파이 맞교환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임.

바. 중·러 관계

● <中-러, 전투기엔진 판매중단 갈등>(7/6)

- 중국과 러시아가 전투기 엔진 수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중국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전투기인 '샤오롱(梟龍 FC-1)'에 탑재되는 엔진 판매를 러시아가 거부하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6일 러시아가 2005년에 샤오롱 전투기 100대에 탑재할 RD-93엔진을 2억3천800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엔진 인도를 미뤄오다가 아예 '동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러시아를 비난했음. RD-93 엔진은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9기의 RD-33 엔진의 개량형임. 중국은 당초 러시아로부터 RD-93엔진을 넘겨받아 샤오롱 전투기 100대를 제작해 전량 수출할 예정이었음.



- 인민일보는 “러시아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샤오룽이 미그-29기와 경쟁할 것을 우려해 엔진 수출을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샤오룽 전투기는 성능이 미그-29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당 가격이 1천만달러 정도로 3천500만달러 수준인 미그-29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가격경쟁력이 크다는 지적임. 샤오룽 전투기는 중국이 파키스탄과 공동으로 중국항공공업제일집단공사를 설립해 개발한 모델로 1인승임.
- 중국은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샤오룽 전투기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무기 시장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가 분점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무기수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시장 판도변화가 예상됨. 러시아는 특히 중국의 샤오룽 전투기 판매 대상국에 알제리가 포함된 점을 주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음. 알제리는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으로 미그-29기 등을 구매해왔으나 수년 전에 이들 전투기에서 일부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는데 대해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자 중국의 샤오룽 전투기에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 기 타

● “최근 러’대사 초치해 ‘안보리 협조’ 요청”(7/9)

- 외교통상부가 최근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상대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9일 파악됐음.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신각수 제1차관이 지난 4일 브누코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면서 “신 차관은 브누코프 대사에게 유엔 안보리 조치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일부 관측통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파견했던 자국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 통보한 데 대해 우리 측이 항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음.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방한했던 자국 전문가팀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가 추가로 제공한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아직 한국에 통보한 게 없고 추가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中 동중국해 훈련 장면 공개>(7/8)

-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실시한 실탄 사격훈련의 사진과 영상이 중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음. 관영 신화통신은 7일 이달 초 수십척의 함정과 전투기 10여대가 편제



를 이뤄 동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 10여장을 공개했음. 관영 중앙(CC)TV 뉴스채널도 이날 보도를 통해 옛새동안 실시된 사격훈련 영상을 편집해 공개했음.

- 이날 공개된 훈련 장면에는 군함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비롯해 전투기 편대비행, 자체 개발한 스텔스미사일 고속정의 유도탄 발사 등이 포함돼 있음.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서해상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해 온 중국이 무력시위성 경고 메시지를 한미 양국에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중국은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관영 언론들을 통해 서해 군사훈련 계획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음.

● <김성환 “전작권 연기 국회동의 필요 없어”>(7/6)

-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6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와 관련,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김 수석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도 국군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전작권을 행사할 때도 양국 통수권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야권 일부에서는 전작권 이양 시기의 연기는 주권 제약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김 수석은 전작권 이양 연기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요구해온 사항은 없었다”면서 “미국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하면서 매년 주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조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음. 김 수석은 또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게 된 배경과 관련,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정부 간 합의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봐서 거론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되는 상황이고 또 북한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질 요소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태 처리 전망에 대해 “조만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지 않겠느냐 기대한다”고 말했음.



예속되거나 북한 자원이 중국에 독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교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단둥(丹東) 등 중국에서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교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5일 단둥을 방문했을 때 교민들로부터 고충이 크다는 얘기도 들었다. 정부에 교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가)돌발적으로 이뤄진 일이고,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남북한이 정상적, 합리적, 발전적 관계 확립을 위한 진통을 거치는 과정인 만큼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한상대회가 개최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중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에서 세계 한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상대회가 열렸다는 것은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자 한·중 경제 협력이 긴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떼려야 뗄 수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이뤄지고 중국 투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

--중국 남방에 비해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 협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책에 따라 동북지역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중국과 한반도 관계나 중국의 재외동포들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오랜 역사를 두고 한국과 교류해온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들의 동북 진출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pjk@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7/06/0511000000AKR20100706159100097.HTML>



[참고 2]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전문>(7/9)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오전(현지시간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간에 합의된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했다. 이 초안은 다른 이사국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열릴 예정인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다음은 P5+2 간에 합의된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전문의 외교부 비공식 번역문이다.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문안(7.8)』

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ere).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e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취(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 결론적으로(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hyunmin623@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7/09/0511000000AKR20100709056900043.HTML>

